

# 이주 브리프 | MIGRATION ISSUES BRIEF

##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삶을 살펴보다 1: 코로나19 시대에 드러난 이주민 차별의 실태

### 코로나19 팬데믹의 파장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팬데믹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파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강조한 측면은 불거진 문제들이 코로나와 더불어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Tactaquin, 2020; 김현미 2020.) 특히 이주여성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은 팬데믹으로 증폭되었고 방역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과 현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그 실태를 마스크 구입, 재난 지원금, 코로나 검사 세 가지 쟁점으로 살펴본다.

## 이주민 배제의 실태

### 1) 공적 마스크 구입에서 이주민 배제

지금은 마스크 구입을 둘러싼 ‘대란’이 자취를 감춘 상황이 되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한국에서는 부족한 마스크 구입을 둘러싼 대란이 있었다.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 정부는 2020년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본 방향은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 공평한 보급,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평한 보급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중복 구매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본인 신분증 확인’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의 국민을 고려해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제시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2019년 ‘개선’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뒤에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이 안된 농·어업 사업장 근로 외국인도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니 6

개월 이상 거주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일부 유학생, 미등록체류자, 난민 신청자 등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된 이주민들은 결국,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 그림 1 >

3월 20일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이 만든 ‘이주공동행동’에서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를 개최했다.<sup>1</sup> 이어 단체들은 마스크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2)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민 배제

마스크 구입에서의 차별과 더불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발표에서 이주민 차별은 한번 더 확인되었다. 2020년 3월 18일 서울시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3월 24일 모든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외국인을 제외한다고 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단체에서 서울시에 전화로 문의를 한 결과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각각 390,177명과 594,795명에 달한다. 대략 98만 여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긴급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4월 2일 이주관련 단체들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 진정했고, 6월 11일 인권위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외국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서울시는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이 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을 뿐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방침이며 추후 재검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20일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1차에서 배제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했다. 하늘길, 뱃길이 막힌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은 그 자리에 묶여 있었다. 그 사이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외국인에게는 재난지원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인권단체들의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나서야 지원에 포함되었다.

한편 4월 3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긴급 생활비 지원지급을 발표했으나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뒤이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긴급 생활비 지원을 발표했으나 외국인 조항은 없거나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인 경우로 한정되었다. 즉 지원금 신청자에 포함된 외국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가 아니라, 한국 국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와 영주권자로 제한되었다. 이 제한으로 인해 현실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었던 세대주 신청 기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리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려 한다.



< 그림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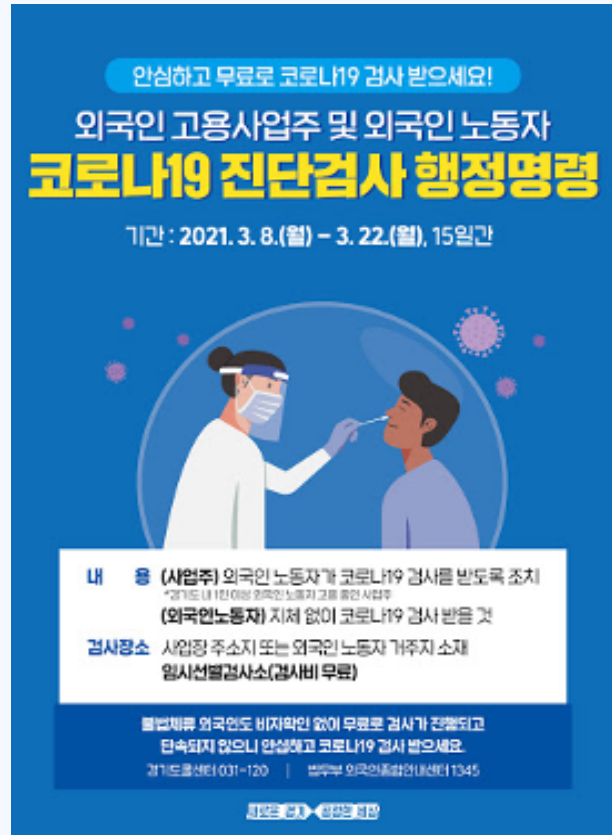


< 그림 3 >

### 3) 특정 외국인만을 표적으로 삼은 의무 검사 강제 시행과 철회

2021년 3월 17일 경기도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감염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힌 지 이틀만에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철회한 맥락에는 3월 19일 인권단체들이 함께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는 공동성명<sup>2</sup>을 필두로, 유럽 30개국 대사들이 외교부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에 재고를 요청한 배경<sup>3</sup>이 깔려있다. 경제신문에서도 문제 삼을 정도의 기본적인 외국인 인권 침해의 현실이 가감없이 폭로된 것이다.



< 그림 4 >

< 그림 5 >

##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서울시 행정명령 철회** -

**검사기간**  
2021. 3. 31.(수)까지 검사 권고

**검사대상**  
- 고위험(발접, 밀접, 밀접)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및 내국인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 검사, 제공된 개인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  
※ 서울시내 고위험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안내)

**검사비용** 무료

검사대상		검사장소
대상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및 내국인 외국인 노동자(서울시 행정명령)	금천구 임시선별검사소(필승아파트 단지 내)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운영시간	평 일: 10:00~17:00 토요일: 10:00~15:00 일요일: 휴무	평 일: 09:00~16:00 토요일: 09:00~14:00 일요일: 09:00~17:00
소유시간	12:00~13:00	
문의	☎ 02-2627-2110, 2111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림 5> 를 살펴보면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없이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 코로나 19는 내국인, 외국인을 가려 가며 공격하지 않는다. 외국인이라고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에서의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공정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꼬박 1년이 넘게 걸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이 되어갈 무렵 2021년 1월 21일이 되어서야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2020년 1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서 배제하였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을 배제한 경기도와 서울시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의 항의 행동과 인권위의 결정 그리고 심지어 관련 경제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이주민 대책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비판에 이어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배제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주민 긴급생계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민간 차원에서 주도한 지원 사업의 규모는 이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채널에서 배제되었던 이주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연대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회성의 적은 금액으로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수준이 아닐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삶을 살펴보다> 연재 시리즈는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람들의 사례와 2020년 한국사회에서 드러난 이주민 차별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이주여성의 삶을 돌이켜 보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 이 시리즈는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범주화되는 이주민들이 겪은 차별의 실체를 드러내 현실을 분석하고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기획이다. 이 시리즈를 통해 드러나는 사례들이 보여주는 이주민의 현실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과 재난 지원은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을 위한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 이 연재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공동 프로젝트 결과다. 연재글에서 인용되는 대부분 사례의 출처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바보의 나눔]과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이주민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지원에서 이주민을 배제함으로써 생겨난 공적 지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연재는 이 <지원사업>을 토대로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실태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 Endnotes

- 1 [뉴스핌 - \[코로나19\] “공적 마스크도 인종차별”...이주민들 ‘전전긍긍’ \(newspim.com\)](#)
- 2 <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3784>
- 3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2170941>

### \* 참고문헌

김현미. 2020. 코로나 이후, 페미니즘이 길을 묻다. <한국일보> 2020.05.06.

Tactaquin, Catherine. 2020. Reflections on the Listening Sessions on Migration, Covid-19 and Gender. (held on the 11 June). <https://migrationnetwork.un.org/reflections/reflections-listening-sessions-migration-covid-19-and-gender>

\* 출처 표기. 문현아, 허오영숙. 2021.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삶을 살펴보다 1: 코로나19 시대에 드러난 이주민 차별의 실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www.ctms.or.kr](http://www.ctms.or.kr)  
[ctms.snu@gmail.com](mailto:ctms.snu@gmail.com)

[@ctmssnu](https://www.instagram.com/ctmssnu)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국제대학원 140-2동 307호

##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 이주 브리프 MIGRATION ISSUES BRIEF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삶을 살펴보다 1:  
코로나19시대에 드러난 이주민 차별의 실태

사전 승인 없이 무단배포 또는 자료 수정 및 편집은 불가하며, 이주브리프의 본문 내용을 활용 시에는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2021)' 등으로 출처를 표기해야 함.